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지원 시사 발언' 일파만파

대통령실 '원론적 대답...러시아에 달려' 민주당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문제' 러시아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 경고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측 반발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겨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한 상황에서 한국도 그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

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하며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헌법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한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당장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국가 안전을 더 큰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는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이 보도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을 뜻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면 당연히 (한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할 것"이라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들면 두 개의 적대국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對日) 외교전에서 일본 편을 든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 관계를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전세사기 주택 경매때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검토"

"저리대출 등 지원 방안도 추진"

"사인간 채무" 공공매입 선 그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

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결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징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

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소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국회 추천 17인으로 특조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기축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6명) 및 희생자 가족 대표(3명)가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별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조오섭 의원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전남 집중관리 물건 많아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몰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잠재적 전세사기폭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경북 183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42건, 충남 39건, 대구 35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이었

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북과 전남이 가장 많은 물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